

제3차(19~23)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(요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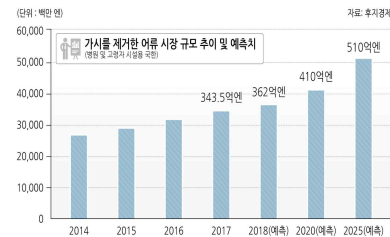
- 원양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, 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(안)을 보고 드림

※ 지역 현장·업종별 간담회 등(5~12월, 5회 이상), 원양산업발전협의회 의견수렴(9~12월), 기재부·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(12월, 5~13), 원양발전심의회(서면, 12월11~17)

1. 원양산업의 여건 및 현황

가 국제 여건변화

- 인구 증가와 단백질 소비 증가 등으로 수산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, 원어 소비 형태는 가공을 거친 수산식품 소비 형태로 변화 전망
- *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'26년에 현재 보다 15.2% 증가한 1억9천만톤 전망(OECD, FAO)



- 연안국 입어료 상승, ODA 등 조업국의 재정적 기여 요구 증가
 - * 참치선망선 척당 입어료(만\$/연간) : '10년 54 ⇒ '12년 86 ⇒ '14년 165 ⇒ '16년 246
- 원양어업은 연안국 단순입어에서 현지합작과 수산투자 방식으로 대응
 - * 러시아 수역 : '94년(합작 1척, 원양 23척) → '17년(합작 21척, 원양 3척)
- (중국) '20년까지 원양어선 3천척, 원양 어획량 230만톤 달성 계획
- (일본) '25년까지 22척(참치연승 19척)의 노후어선 신조대체 확정
- (EU) 어업협정 체결, 수산파트너십, ODA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 확대

나 국내 여건변화

-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상실 등으로 '92년(102만톤) 이후 지속 감소하다, 최근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'17년에 79만톤까지 회복
- * 순수 어류 생산량은 원양생산량(47%)이 연근해·양식 생산량 보다 많음

《국적선+합작선 원양어업 생산량 추이》

(단위 : 만톤)

구 분	'13년		'14년		'15년		'16년		'17년	
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	생산량	척수
합 계	73.9	477	83.0	388	74.2	344	62.4	301	78.7	280
국적선	55	342	67	333	58	289	45	255	44	221
합작선	23	135	25	55*	30	55	33	46	35	59

* 미영업 신고업체 합작어업 신고 폐지(80건 : 북중미(미국, 캐나다, 우루과이), 동남아(인도, 인니, 필리핀, 미얀마), 아프리카(모잠비크, 기니비사우, 동티모르, 가나), 기타(뉴지, PNG))

- 원양업계는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가 가능한 고가 어종(참치, 이빨고기)과 대중성 어종(오징어, 꽁치)을 중심으로 업종 개편
- 원양어업은 제조업을 제외한 국내 타 업종보다 경영여건 우수

《우리나라 업종별 주요경제지표('16년)》

(단위 : %)

구 분	원양어업	어업	농업	광업	제조업	도소매업	서비스업
기순이익률	8.0	3.5	4.2	-0.6	5.1	4.1	3.2
자기자본비율	50.6	44.2	43.3	24.7	55.6	40.1	36.5
부채비율	97.5	126.2	130.1	305.2	79.8	146.2	174.1

- 중견기업 중심으로 원양선사의 자산과 매출액이 증가 추세이고,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급속 감소되는 등 경영상태 개선 중
 - * 중견기업 매출액 : ('13년) 2.9조원 → ('17년) 3.8조원
 - * 중소기업 부채비율 : ('13년) 304.5% → ('17년) 131.8%
- 잡는 어업의 한계로 원양의 선두 중견기업(동원, 사조, 신라 등)은 유통·가공·양식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 기업으로 진화 모색 중
 - * 동원산업은 해외양식 사업 진출을 위해 2년 전부터 양식준비 T/F팀 운영 중

다 반성

□ 원양어선의 노후화로 경쟁력 저하

-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(융자 70%, 금리3%)은 금리·담보 등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곤란

* 전체 221척 중 선령 20년 이하는 12%인데 반해 31년 이상(38%), 41년 이상(11%)

→ 안전·복지를 위해서도 새로운 어선건조 지원시스템 필요

□ 원양산업(어장, 쿼터)과 ODA 지원 사업간의 연계성 미흡

- 해양수산관련 ODA 사업은 매년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, ODA 지원사업과 원양산업 등 해외진출 연계성 부족으로 효율성 저하

→ ODA 지원과 어장확보 등 해외진출과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

□ 원양 양식·가공산업, 합작 원양어업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미흡

- 잡는 원양어업에서 양식·유통·가공 등이 복합된 원양산업을 통해 삼성 등과 같은 글로벌 원양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 필요

→ 전세계 원양산업을 리드하는 글로벌 원양기업 육성정책 필요

□ 전문 어선원 확보, 어선원 복지 수요에 대한 대책 미흡

- 어선 노후화에 따른 낙후된 선실환경과 고립된 노동환경 등으로 어선원 고령화, 내국인 선원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

* 선원 관심 : 낙후된 선실 환경, 충분하지 않은 식수·청수 공급, 어업인 의료 등

→ 어선원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·재정적 지원사업 필요

2. 비전 및 목표

1. 정책방향의 전환

1 어선안전 **정부 융자지원 → 정부출자 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**

- 정부·은행 출자(50%, 30%) 펀드 형태를 통해 금리·담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,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 모두를 '22년까지 신조대체

2 어장개척 **민간 주도 →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장개척**

- 연안국 ODA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국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, 원양업체의 안정적인 조업권 유지

3 선원·복지 **생산위주 근로조건 →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변모**

-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 개선에 의해 쾌적한 복지공간을 조성하고, 젊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원양어업 경쟁력 확보

4 산업구조 **잡는 어업 중심 → 양식·가공 등으로 산업 다각화**

- 잡는 어업만으로는 글로벌 원양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양식·유통·가공이 복합된 규모화된 국제기업을 통해 경쟁력 확보

5 국제협력 **규칙 준수자(rule taker) → 규칙 제정자(rule maker)**

- 과거 국제기구 등의 자원관리보존 조치 이행 위주 정책에서 선진 조업 규범을 선도하고,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후발 원양산업국 견제

2. 비전과 목표

비전

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

목표

지속가능한 원양어업

- 원양생산량 : ('17) 79 → ('23) 90만톤
- 원양안전펀드 : ('19) 100 → ('23) 1,700억원
- ※ 원양생산 : 국적선+합작선 합계 생산량

국제경쟁력 있는 원양산업

- Star 시범사업 : ('18) 0 → ('23) 2개
- ODA 지원 : ('18) 91 → ('23) 200억원
- ※ Star사업 : 해외 진출 양식·가공 등 시범적 모델 사업

정책 분야	주요 추진 과제
① 어선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양어선 안전펀드(Safe Fund) 조성 •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• 여건변화에 따른 원양어업 효율적 구조 재편
② 어장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거 철수어장 복원, 연안국 조업어장 개발 • 해외자원 확보와 ODA 연계로 통한 효율성 강화
③ 선원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기사 등 원양산업 전문인력 확충 • 원양어선 식수·생활용수 공급 개선사업 추진 • 어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• 원양 어선원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도입
④ 산업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도 개선을 통한 원양 합작사업 활성화 • 수출 상대국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• 국내 원양산업(양식 등) 해외진출 관리체계 구축
⑤ 국제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Rule Maker로서 위상강화 • 읍서버 확대,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직업군 육성 • 협상전문가 육성을 통한 국제수산물기구 선도적 대응 • 국제수산물기구 과학적·재정적 기여도 확대

3. 주요 추진과제

① 어선안전 - 1 원양어선 안전펀드 조성(안전하고 쾌적한 어선건조)

- (현황·문제점) 선박 노후와 등으로 선박사고 우려와 거주여건 불량
 - 원양어선의 대부분은 60~80년대 건조된 노후 어선으로 안전사고* 우려, 선원의 승선기피, 낮은 생산성 문제 등을 안고 있음
 - * 선령 40년을 초과하는 초고령 어선이 3개 업종에 24척('17.12)
 - 연안국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정책으로 입어 제한 가능성
- (추진계획) 원양안전펀드 1,700억원(정부출자 850)을 조성하여 초고령(40년 초과) 선박 17척에 대해 '23년까지 신조완료('19년 50억원 반영)
 - 친환경·복지형 표준선형 개발을 통해 중견선사 신조를 유도하고, 신조어선에 인센티브(어획할당량 우선배분 등) 부여 방안 검토

① 어선안전 - 2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

- (현황·문제점) 외해에서 장기간 조업으로 사고 발생 시 적기 구조곤란
 - 원양어선은 승선인원이 30여명 이상이고, 해상 조업기간 최대 20개월
 - 원양어선 안전관련 지도·감독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, 실제 승선원 확인, 어선검사 등 실질적인 관리시스템 미흡
- (추진계획) 고령, 미귀향 해외선박 등에 대한 특별안전관리 추진
 - 선사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「원양산업발전법」 개정('19 상반기)
 - * 30년 이상 고령선박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근거 마련(문제선박 출항정지 등)
 - 해외에서 입·출항하는 미귀향 선박('18년 65척) 현지 지도·점검(1회/년)
 - 승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시·청각 교육자료(선박대피 요령 등) 배포

① 어선안전 - 3

여건변화에 따른 원양어업 효율적 구조 재편

□ (현황·문제점) '90년 중반이후 여건변화에 대응 중견업체 합작으로 전환

- 중견업체와 달리 소규모 원양업체(1~5척 소유) '94년이후 지속 감소 되었으나, '13년 이후 소규모 업체도 경영여건 안정화 추세

* 부도업체 : '10년(9개사) → '13년(3개사) → '17년(0)

- 3D 업종 인식으로 원양경영체(주로 1~2척 소유) 후대 경영승계 기피

□ (추진계획) 경쟁력 있는 기존 원양업체 위주로 원양업체 재편

- 신규진입자 보다 기존 경영업체가 폐업어선 승계시 인센티브 부여
* 어선안전펀드(어선 신규 건조), 경영자금, 조업 쿼터배분 등에서 가점부여 등
- 트롤 등 자원남획성 업종은 합작전환 등 자연도태를 유도하고, 채낚기·저연승 등 어획선택성 높은 업종은 우대방안 강구

② 어장개척 - 1

과거 철수어장 복원, 연안국 조업어장 개발

□ (현황·문제점) 서아프리카(트롤 IUU)와 북태평양(유자망 금지) 어장 상실

- 서아프리카 어장은 참치연승 어장으로, 북태평양은 새로운 개량 어구(신형 채낚기, '17년 일본 40여척 조업)로 어장 회복 가능성 확인 중

*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망은 '79년 조업 시작으로 '88년 최대 25만톤 생산

□ (추진계획) 정부 주도의 어업협정, 해외자원조사 등을 통해 신어장 확보

- ODA(냉동공장 등) 지원과 정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해 신 어장확보
* 아프리카 연안국가는 어항, 냉동·냉장,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음
- 연근해 채낚기 업계, 수산과학원(개량형 어구·어법 개발, '18년 하반기) 등과 협업으로 민·관 합동 해외자원조사 추진('19년 6~8월 중)
* 기존 채낚기(마름포깍)로는 어장성이 없으나, 개량형(자율제어, 원형) 어장성 확인 중

② 어장개척 - 2

해외자원 확보와 ODA 연계를 통한 효율성 강화

□ (현황·문제점) ODA 지원사업과 원양어업 쿼터확보 연계성 미흡

- '18년 해양수산 ODA(14개국, 91억원), 우리나라 전체 ODA(3조482억원)
- 태평양 3개 도서 국가와는 정부가 아닌 민간(원양협회)에서 입어협상
* 남태평양 도서국은 참치 중요어장이자, 정부지원 협력사업에서 소외

□ (추진계획) 정부주도 어업협정, ODA 지원의 연계를 통한 쿼터 확보

- 조업어장 확보 가능성 확인 후 연안국 ODA 지원 우선순위 결정
* 협력 필요성에 대한 기준 검토 후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ODA 집중 지원
- 既 지원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해양수산 ODA 패키지 개발 추진
-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·육성('19년)

③ 선원복지 - 1

해기사 등 원양산업 전문인력 확충

□ (현황·문제점) 노사합의에 의해 원양어선 해기사는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, 최근 고령화 등으로 업계는 전문 인력(기관사 등) 구인난

- 해상 장기간 근무(18~20개월)와 봉급수준 등으로 특히 참치연승에 대한 능력 있는 기관사 선호도 낮아, 어선안전이 우려되는 상황
* 채낚기(월 939만원), 선망, 트롤, 봉수망 보다 타 참치연승(월 640만원) 봉급 下

□ (추진계획) 외국인 기관사 단계적 허용 등을 통한 전문선원 인력 확보

- 노사 간 적절한 중재를 통해 시급한 업종부터 외국인 기관사 허용
* (업계) 전 원양업종 외국인 해기사(항해사, 기관사, 통신사) 도입 주장
* (노조) 내국인 해기사를 주장하지만 일부 업종 타협여지 있음
- 승선예비역 정원을 유지하고, 대학·고교 해기사 취득 장학금 지원 추진

③ 선원·복지 - 2 원양어선 식수·생활용수 공급 개선사업 추진

- (현황·문제점) 어선의 노후화로 식수·생활용수에 어선원 불만
 - 노후 선박의 오래된 배수관, 식수탱크에서 녹물질 등 발생
 - 어선 조수기(바닷물→증류수, 3~4톤/일)로는 어선원 수요충당 곤란
 - * 우리 국민 1일 평균생활용수 사용량('16년 기준) : 287리터
- (추진계획)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식수·생활용수 관리기준 마련
 - 원양어선 전반에 대한 식수·생활용수 공급 실태에 대한 조사('19년)
 - 원양어선 조수기 현대화 사업(용자)과 식수·생활용수 관리지침 제정('20년)
 - * 배수관·저장시설 현대화(스테인레스 등) 사업, 임시 판매용 생수통 공급 등
 - 원양어선 신조(원양어선 안전펀드 활용)시 관리지침 적용 의무화 추진

③ 선원·복지 - 3 어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

- (현황·문제점) 공간부족, 인터넷 환경 열악 등으로 젊은층 승선기피
 - 원양어선 221척 중 71%(157척) 500톤 미만으로 선원거주 공간이 부족하고, 인터넷 미비(선망업종 외 타 업종 미도입) 등 근무여건 열악
 - * 500톤 미만 : 연승 100%, 오징어채낚기 81%, 꽁치봉수망 86%
 - 참치연승 본선은 장기간 해상근무, 어획물은 운반선 이용
 - * 해상근무기간 : 참치연승(18~20개월), 참치선망(1개월), 타 업종(6개월 이내)
- (추진계획)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등
 - 원양 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·욕실·활동 공간 고려, 기준마련('20~'21년)
 - * 중장기적으로 ILO어선원노동협약('07년 협약발효, '18.10월 현재 12개국 승인) 적용 추진
 - 원양어선 내 인터넷 사용시설 '22년까지 도입 완료(노사합의)
 - 장기해상 근무 어선원의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추진

③ 선원·복지 - 4 원양 어선원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도입

- (현황·문제점) 장기근무, 좁은 공간, 화재·전복 등 안전사고 우려, 불규칙한 고된 노동, 소통 어려움(다문화)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발생
 - 선원 고령화 진전과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서의 장기간 조업은 질병가능성을 높이고 선내 질병·사고 발생시 긴급한 응급처리 곤란
- (추진계획) 트라우마센터와 해양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복지 수준 향상
 - 원양어선원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트라우마센터 설립
 - * 예산당국과 협의('19년)하여 '20년 1개소 예산(정부+지자체+업계) 확보 추진
 -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통해 전 원양어선 도입 추진

④ 산업구조 - 1 제도개선을 통한 원양 합작사업 활성화

- (현황·문제점) 국적어업 생산량 감소, 합작어업 생산량 증가추세
 - 공해조업 규제 강화와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등에 따라 해외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한 수산물 생산('12년, 26만톤 → '17, 35)의 중요성 대두
 - 원양허가 반납, 해외 합작어업 신고(지분 49% 이상)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일부 제도적 허점 발생
- (추진계획) 제도를 개선하고, 해외양식 등 관세감면 범위 확대 검토
 - 합작어선으로 전환, 연안국 쿼터를 대리조업하는 경우 관세감면 검토
 - 원양 합작기업의 관세 감면 허용 지분율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('19년)
 - 해외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, 국내 원양기업이 해외에서 양식하여 국내로 수입(가공식품 원료 등)하는 경우 관세감면 방안 검토('20년)

④ 산업구조 - 2 수출상대국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

- (현황·문제점) 참치는 수산물 수출 1위 어종(41억불)으로 원양수산물 수출의 85.4% 점유하고, 일본·태국이 참치 수출의 85% 차지
 - 일본·태국 외 우리나라의 10대 참치 수출 상대국에 대해서는 그 간 FTA(한·EU, 한·베, 한·중, 한·미) 등을 통해 관세철폐 완료
 - * 국가(수출액 비중): 태국(41.1%), 일본(22.9%), 스페인(5.5%), 베트남(5.4%), 이탈리아(4.5%), 중국(2.3%), 미국(0.3%), 기타(18.0%)
- (추진계획) 관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 한국산 참치의 가격경쟁력 제고
 -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태국·일본이 포함된 RCEP('19년 타결목표) 등 FTA 협상*에서 상대국의 참치류 관세 철폐를 목표로 적극 협상
 - * RCEP(총 16국), 한·중·일 FTA 협상, 한·아세안 FTA 개선협상 등

④ 산업구조 - 3 국내 원양산업(양식 등) 해외진출 관리체계 구축

- (현황·문제점) 수산물 수요증가, 어업자원 감소 등으로 세계 각국은 수산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양식사업 투자 확대
 - 해외진출 추진 업체들은 정보부족, 해외 현지 네트워크, 체계적인 시장조사·수익성 분석의 어려움으로 진출 주저
 - 수산부문의 양식생산·유통·가공 등을 위한 해외 현지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없어 해외진출 사업자 어려움
- (추진계획) 해외양식 Star 사업을 통한 해외진출 모델사업 발굴 추진 등
 - 현지조사, 사업타당성 조사(KMI), 양식 기술지원(과학원), 사업 자금융자, 법률 자문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정부 시범사업(Star 사업) 추진
 - 원양산업 진출센터, 자문인력 Pool을 통한 체계적 투자정보·컨설팅 지원

⑤ 국제협력 - 1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Rule Maker로서 위상강화

- (현황·문제점) 국제 IUU 근절 한·EU 공동선언문 서명·발표('18.10)를 계기로 수세적 Rule Taker 입장에서 원양 모범조업국으로 위상 변화
 -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 추진 중
 -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어장 발굴 논의, 해양환경 오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조업규제 논의 등에 미 참여시 어장상실 우려
- (추진계획)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 대응
 - 최근 FAO에서 연구 중인 Global Record System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IUU어업 방지와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
 - 글로벌 인증(MSC) 취득에 대한 정부지원과 다양한 필요 정보공개 등을 통해 원양수산물(IUU Free 수산물)의 국제 브랜드 인지도 제고

⑤ 국제협력 - 2 읍서버 확대,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직업군 육성

- (현황·문제점) 국제수산기구는 읍서버 승선비율 상향(5→20%) 논의 중
 - 현재 43명('18.10 기준)의 읍서버가 활동 중이나 국제기구 요구 수준 충족을 위해서는 '18년 80명, '22년에는 약 12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
 -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읍서버 인원부족과 더불어 업체가 50%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읍서버의 국제 신뢰도 저하요인
- (추진계획) 전문화 등을 통해 젊은층 양질의 일자리(전문직업군)로 육성
 - 국가 자격증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읍서버를 전문 직업군으로 육성
 - 읍서버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, 역량강화로 외국어선 승선기회 확대
 - * '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읍서버 승선율을 5 → 15%까지 상향

5 국제협력 - 3

협상전문가 육성을 통한 국제수산기구 선도적 대응

□ (현황·문제점) 다양한 국제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**협상전문인력 확대 필요**

- 어업권 국제 규범화 논의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제수산분야 대응 수요*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**체계적인 전문인력 확충 필요**

* 원양어업 영향을 고려한 BBNJ 협약 논의 참여, 국내 뱀장어 유통에 제약이 되는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문제 대응, 세계 어업권 국제 규범화 논의 등

- 국제수산기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표어종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**국내 전담인력 부족** 등으로 체계적 대응에 한계

□ (추진계획) 협상전문가 양성,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협상능력 향상

- 민간협상 전문가를 양성하고, 국제수산기구 의장단 진출 적극 지원

- 국제 기구별 민·관·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기구 진출 확대 추진

* FAO, IMO, RFMO 등 기구별 담당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협의체 구성

5 국제협력 - 4

국제수산기구 과학적·재정적 기여도 확대

□ (현황·문제점) 국제수산기구의 규모 및 영향력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적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나, **재정적·인력적으로 지원 미흡**

구 분	'17년	'18년	사업내용
과학적 조사 예산	9억원	9억원	<div>중서부태평양수산위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WCPFC 표지방류사업 출연(2억원) 등 <div>남방참다랑어보존위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CCSBT 생태특성 조사(2억원), CCAMLR 크릴 음향조사 및 과학조사(4억원) 등 <div>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</div>

□ (추진계획) 과학적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및 조직 확보 추진

- “과징금, 원양산업발전 기금”제도 신설 근거(원양산업법) 마련

- 국제기구의 과학조사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확보 추진

* 수산자원관리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 업무위탁(일부 직접, 일부 아웃소싱)

4.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

구 분	실행계획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①어선안전	• 원양어선 안전펀드 조성					
	•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					
	• 여건변화에 따른 원양어업 효율적 구조 재편					
②어장개척	• 과거 철수어장 복원, 연안국 조업 어장 개발					
	• 해외자원 확보와 ODA 연계를 통한 효율성 강화					
③선원·복지	• 해기사 등 원양산업 전문인력 확충					
	• 원양어선 식수·생활용수 공급 개선 사업 추진					
	• 어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					
	• 원양 어선원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도입					
④산업구조	• 제도 개선을 통한 원양 합작사업 활성화					
	• 수출 상대국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					
	• 국내 원양산업(양식 등) 해외진출 관리체계 구축					
⑤국제협력	•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Rule Maker로서 위상강화					
	• 오피서 확대,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직업군 육성					
	• 협상전문가 육성을 통한 국제수산기구 선도적 대응					
	• 국제수산기구 과학적·재정적 기여도 확대					